신기술활용 촉진을 위한
합리적 규제 운용 방안

2017. 4. 4.

테크앤로 대표 구태언
taeeon.koo@teknlaw.com

TEK & LAW

디지털 경제로 급선회 – 디지털 마켓과 규제

재화와 서비스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유통되는 시장

- 전통시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온라인서비스와 디지털 기술로 연결해주는 시장
- 온라인에 특화된 서비스의 공급도 포함하나, 디지털 기술의 중개를 통해 오프라인의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시장
-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가 만나는 플랫폼의 장악
- 글로벌 기업들은 검색 서비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메신저 서비스, VR 서비스, 인공지능 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를 모이게 하고 그들로부터 데이터를 입수하여 소비자의 행태를 예측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장악
- 전통시장을 지지하는 법률제도와 정부를 갖고 있는 우리 혁신기업들은 디지털 시장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현행법위반 또는 정부의 금지속에 경쟁력을 잃고 있음

전통과 혁신의 법률전쟁 : O2O현상과 플랫폼 전쟁

Internet의 출현과 O2O의 시작

신기술 핀테크 본인인증, 정부 규제에 부딪혀 2년 소모

핀테크 상징인 신용카드터치인증

금융위는 가능
방통위는 불가능, 사업주체 변경 하라고 요구하다가..
국무조정실이 강제조정

허가된 온라인본인인증은 현재 휴대폰본인인증 뿐

◇한국NFC가 개발한 카드터치 본인확인 서비스는 금융당국으로 부터 허가를 받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불가 판정을 받으면서 이중규제 적용을 받는중이다. 사진은 한국NFC 'NFC간편결제' 이미지. [사진=한국NFC]

NAVER 뉴스 인쇄하기 취소

엇갈린 `신용카드 NFC 인증` 해석… 이번주 국무조정실서 판가름난다

디지털타임스 | 기사입력 2016-08-28 17:09

금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엇갈린 유권 해석으로 도입에 진통을 겪고 있는 '신용카드 근거리무선통신(NFC) 본인 인증 서비스'와 관련해 국무조정실 조정 결과가 이번 주 나올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이번 주 중 '신용카드 NFC 본인 인증 서비스' 도입에 대한 정책 조정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NFC 본인 인증'은 온라인 회원 가입 등 온라인에서 본인 인증이 필요할 때, 신용카드 발급 시 미리 등록해 놓은 정보를 활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NFC 기능을 활용, 스마트폰에 신용카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본인 인증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핀테크 기술업체인 한국NFC, 신용카드사들이 이 서비스를 준비해왔으나, 금융위와 방통위가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서비스 도입이 전면 중지된 상태다. 금융위는 이 기술을 금융권에서 본인 인증 수단으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방통위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이 본인 인증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부처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국무조정실은 앞서 지난 18일에 금융위와 방통위 관계자를 불러 '신용카드 NFC 본인인증'에 대한 두 부처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어 지난 25일에는 관련 서비스를 준비해 온 해당 업체와 방통위 관계자를 다시 소집해 '끝장 토론'을 벌였다.

지난 25일 회의에선 NFC 인증을 위해 신용카드사를 본인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갈렸다. 방통위는 포털 등에서 이 인증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사가 본인 인증 확인기관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반면 한국NFC 등 사업자는 서비스 참여 업체에 이미 방통위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인 KCB가 포함돼 있는 만큼, 신용카드사의 추가 지정은 무리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핀테크 본인인증 방통위 규제해소했더니 기득권 반발

방통위를 넘었더니..

이통3사가 사업시행주체인 신평사를 'SMS본인확인계약'을 근거로 압박

청와대 중재로 2017. 3. 시험실시 허가

최초 금융위 민원 제기로부터 총 3년여 소요

정부가 특정 국책사업을 직접 관장하면서 관산복합체 형성이 가장 큰 문제

아이뉴스24

"카드인증 안돼"이통3사, 신평사 압박에 방통위는 '침묵'

본문듣기 | 설정

기사입력2016-09-21 17:03 | 기사원문 | 3 | 4

<아이뉴스24>

[성상훈기자] 아이핀, 휴대폰인증 외에도 신용카드를 통한 주민등록 기반 실명인증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서비스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휴대폰인증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돼 있는 이동통신 3사들이 이용자 편익보다 휴대폰 인증 매출 하락을 우려, 이를 대행하는 신용평가사(대행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아이뉴스24가 입수한 SK텔레콤과 신평사 간 본인확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대행 계약서에는 "사전합의 없이 SK텔레콤의 '본인확인 서비스' 외 다른 본인확인이나 인증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별도 사유 없이도 SK텔레콤이 통보하는 운영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한달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심지어 인증에 필요한 입력창 등까지 통신사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계약서 상 조항에 대해 통신사 담당자가 임의로 이의 적용이나 유보를 결정 할 수 있도록 돼있다"며 "신평사 입장에서는 통신사 담당자가 사장보다 더 높은 사람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SMS 인증과 신용카드 터치인증의 편의성 비교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pzjsG6DNMsQ

중국 정부의 IT산업 육성전략 – 신기술의 자유로운 경쟁의 장 형성이 핵심

[하이브리드 中國경제] [1]

- IT 기업의 4가지 성공 요인

①'짝퉁'도 괜찮다는 중국 - 스마트폰 1대에 특허 25만갠데 샤오미는 특허료도 제대로 안 내

②中중산층, 주요 소비자로 급부상 - 20만~30만원대 저렴한 가격에 품질·디자인 더하자 고객 열광

③유학파 400만명 중 절반 귀국 - 유창한 영어·글로벌 네트워크로 바이두·화웨이 등 창업 이끌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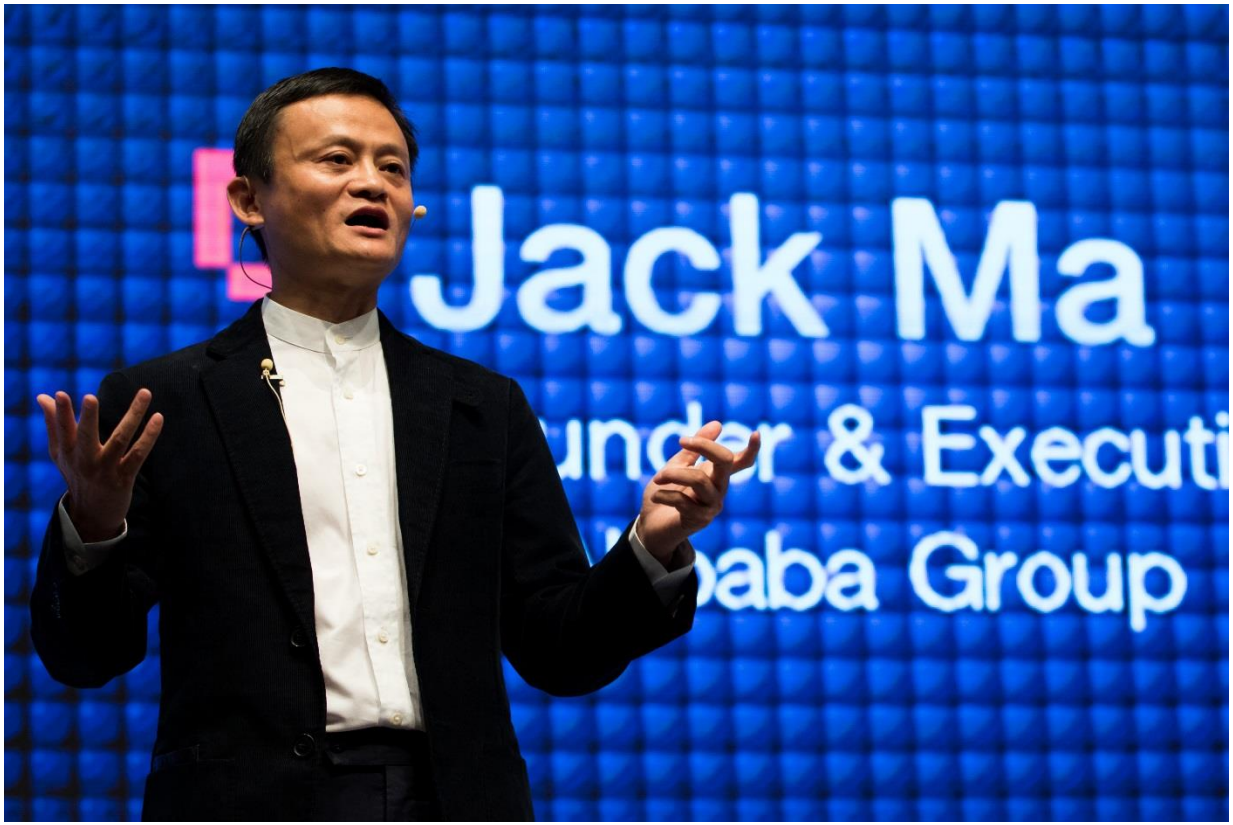
④자국 기업엔 규제 없어 - IT 분야선 외국기업 진출 막아… 사실상 中기업 리그나 마찬가지

④규제 울타리로 자국 기업 육성

중국 정부는 IT·핀테크(정보기술을 접목한 금융 서비스) 등 성장 속도가 빠른 산업에서는 자국 기업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는다.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를 택해 문제가 발생하면 대처하는 식이다. 반면 외국 기업들은 규제를 적절히 활용해 견제한다. 작년엔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반독점 위반 혐의로 사상 최대인 60억위안(1조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정부 조달에서 애플 등을 제외했다.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중국팀장은 "인터넷 등에서 중국은 외국 기업 진출을 막고 있어 자국 기업들의 리그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중국 공산당의 선택 – 미국의 일국지배에 반기를 들다.

이제는 DT(Data Technology)의 시대 – 당신은 내 손안에



201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기조연설 中 :

"이제 20년간 지속되어온 IT 시대가 저물고, **앞으로 30년간은 DT(Data Technology) 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인터넷 시장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는 방대한 **고객 데이터를 활용해 개별 고객의 요구에 부응할 줄 아는 기업이 성공하는 'DT시대'** 입니다. "

디지털 마켓은 온라인 산업과 오프라인 산업의 융합

- **O2O(Online to Offline)**
  - 온라인기업이 이용자 플랫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산업을 장악해 나가는 현상
  - **O2O는 이미 음악, 출판, 게임, 광고, 언론, 운송, 금융(핀테크), 자동차(카테크), 의료(헬스케어테크) 등 각 분야를 지배**
  -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글로벌 기업이 국내 시장에 바로 진입
  - "소비자가 공급자를 선택하는 시대 "

- **금융, 운수, 의료 산업 등 인•허가가 발달한 사업은 O2O기업이 전통산업과 가시적 충돌 현상 빈발**

- **전통산업을 규제하는 정부부처와 IT정책 부서간 규제 중첩 현상도 심화되나, 조정 부재**

조정되지 않은 각 부처 규제의 중첩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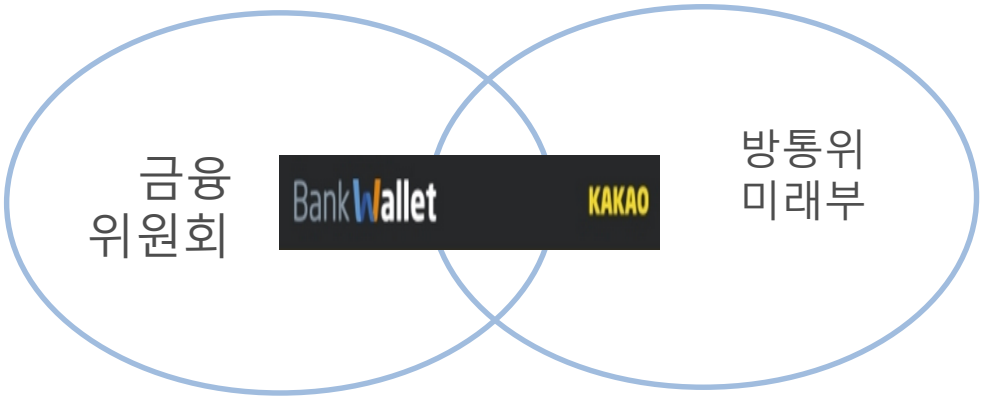
☐ **핀테크의 경우:**

- '금융회사'는 2014 범정부 개인정보유출 재발방지 TFT 결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적용
  - 개인(신용)정보 수집/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서식 등 전면 개편
  - 신용정보보호법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금융산업 관련 규제 적용 여부 결정
  - Ex) PG사 = 전자금융거래법, 빅데이터 분석 = 정보통신망법 or 개인정보 보호법

☐ **'전통적 금융규제'와 'IT 산업규제'가 중첩 적용되어 핀테크 산업발전 장애**

- 핀테크기업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 정보통신망법 적용(예, 뱅크월렛 for 카카오)
- 방통위 산하로? 금융위 산하로?

융합신산업에 중첩적 규제로 총량이 초과되는 규제가 적용되는 문제점



법뮤다 삼각지대 – 미래 혁신이 실종되는 규제의 블랙홀

핀테크서비스는 3중 규제로 총량과다 - 정부에 규제총량 통제기능 부재

개인정보 규제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위치정보법
- 신용정보법 등

Ex. 고객 기반 확충 곤란,
Big Data를 통한 신용도 평가
등 신규 모델 창출 불가

Ex. Opt-in 기반 영리성
광고 전송 금지,
전자상거래 정보 처리 규제

전통산업 규제

(금융산업의 경우)

- 전자금융거래법, 전자금융감독규정
- 금융기관검사제재시행세칙
-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대부업법,
- 자본시장법, 유사수신행위법 등

온라인 규제

- 정보통신망법
- 전자상거래법
- 통신비밀보호법 등

규제 양산 차단과 신기술적용 유예

-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라 -

디지털 혁신 경제 구현을 위한 규제 혁파

□ 배경 및 현황

-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경제는 전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세계 산업구조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고 있음
  - 제조업과 오프라인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디지털경제 패러다임으로 전환 중
- 4차산업혁명이 새로운 글로벌 경제 트렌드로 자리매김하는 상황에서 기존규제 시스템은 이러한 트렌드에 역행
  - 우리나라는 공인인증서, 휴대폰 본인확인제, 셧다운제 등의 갈라파고스형 규제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혁신이 저해되고 있음

□ 전통시장을 **대변하는 정부조직 및 법령을 디지털 정부 및 법령으로 변환하는 작업에 속히 착수**

- 정부 각 부처에 디지털 산업 부서를 최우선 배치하고 나머지 부처는 이에 협력하는 구조로 변경

주요 정책 제안

1. **(디지털 경제형 규제 패러다임 혁신)** Negative방식 규제, 중복규제 해소, 국내 기업 적용 역차별 규제 및 Off-line규제가 On-line서비스를 출시저해하는 차별 규제해소

2.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규범 확립)** 갈라파고스 규제철폐, 경쟁국들에 비해 높은 규제 완화, 국내 규제가 글로벌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담보할 수 있는 국제적인 규범형성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3. **(사전 규제점검 센터)** 국민이 자신의 사업내용을 센터에 신고하면 정부가 스스로 해당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안에 통지하고 이후 통지되는 규제는 적용금지

4. **(사회영향 평가제도 도입)** 기존 산업 및 법규제와 충돌시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영향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적절한 사회적 합의 및 정책 방향성 제시

5. **(규제 양산방지 입법관리 시스템)** 시행령 도입시 법률의 위임 범위내인지 국회확인 의무화, 금지사유의 제한적 열거 원칙화를 통해 규제양산을 막는 입법관리 시스템 도입